

국립대 교수 1000명 늘리고, 의대여건 개선에 5조 이상 투입

(3년간)

(6년간)

교육부, 의학교육 투자 방안

단기적으로 기존시설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예타면제 신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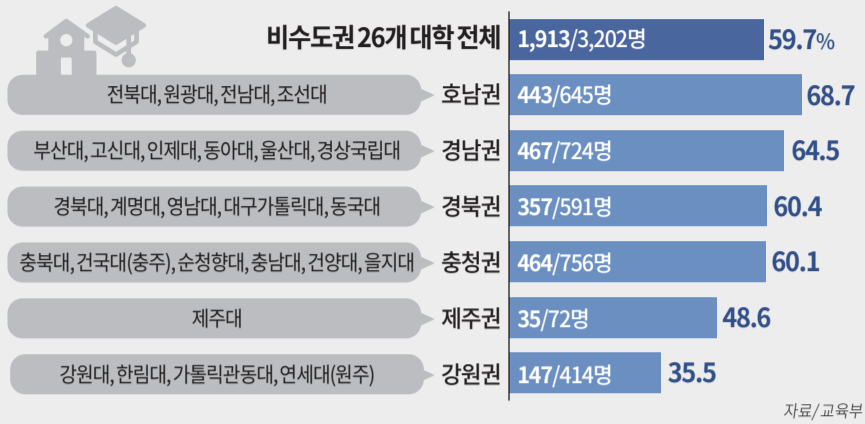
내후년까지 지역인재 61.8% 선발 지역전문의 96명 월수당 400만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도 61.8%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 교수 채용 지원...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

2025학년도 권역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한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 의료여건을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력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구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는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전국 38개 의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61.8%까지 확대

의대생이 그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 정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인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추석 차례상 부담 던다... 신선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

'성수품 수급 점검' 민당정 협의회 배추 출하장려금 포기당 1000원 쌀값 안정위해 선제적 시장 격리

추석을 앞두고 민간·정부·여당이 성수품 중 배추의 가격이 높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출하장려금 상향을 지원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만헥타르(ha)의 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11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후 추가 격리하는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희용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부 간사, 정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간측에서 이승호 한국농수산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25일에 열렸던 고위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명절을 앞두고 조기에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를 반영해 열렸다.

◆ 배추 물량 공급 확대·출하장려금 지원 민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민·당·정은 추석을 대비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당·정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경우 2024년산 출하량의 증가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추는 가격이 다소 높다고 보고 정부가 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

도 현행 포기당 500원에서 포기당 900~1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추석 차례상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 등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쌀 공급과잉 우려에 조기 시장 격리

민·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수확기 쌀값을 조기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2만ha의

밭 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시장에서 격리할 물량은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이미 공공비축미로 사기로 한 36만톤(t)을 더하면 총 46만톤의 햅쌀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후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격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당·정은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음성